

시론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최근 한국 사회 구성구석을 행하는, 상대를 향한 적대적 언어와 극단적 풍경을 보고 있으면 로베르트 무질(1880-1942, 오스트리아)이 백 년 전쯤(1930년)에 발표한 소설 『특성 없는 남자』 1권에 들어있는 문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오늘날 무수한 다수는 또 다른 무수한 다수를 향해 지속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에서 있다. 자기 자신의 범위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뿌리 깊이 불신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의 한 본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인이 유대인을, 또한 축구 선수가 피아노 연주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가지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단지 경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주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적대적 행위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베르트 무질은 당시 유럽 사회를 채우고 있던 적대감과 불신이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전조를 통해 일찌감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전조를 느꼈던 이는 로베르트 무질만이 아니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1883-1946)는 1차 세계대전 전후 협상 과정에서

경계를 떠도는 반지성

적대적 전후 처리가 경제적 파탄과 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부상을 불러오리라고 우려했고, (평화의 경제적 결과) (1919)를 통해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알다시피 위대한 경제학자와 작가가 예견한 비극을 유럽인들은 결국 막지 못했다.

잠시 로베르트 무질과 『특성 없는 남자』를 살피고 가야겠다. 20세기 3대 독일인 문학으로 프란츠 카프카(1883-1924, 체코)의 『소송』, 토마스 만(1875-1955, 독일)의 『마의 산』, 로베르트 무질(1880-1942, 오스트리아)의 『특성 없는 남자』를 꼽는다. 독일의 대표적 지성들은 『특성 없는 남자』 1위로 꼽았다고 한다. 20세기 초 유럽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를 탁월하게 진단한 소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계’는 존재를 위해 꼭 필요하다. 경계가 없다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물방울조차 존재하기 위해 표면장력을 지닌다. 경계가 있어 몸이 생기고, 생각도 경계를 오갈 수 있어야 만들어진다. ‘나-나’의 인식이 경계 덕분에 생긴다.

경계와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계와 경계 사이에 차이와 맥락이 있어야 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려는 다양한 생각이 만들어진 후에야 공동체가 탄생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식이 좋은 관계와 좋은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다. 경계 밖의 존재가 연인이나 친구가 되고, 적이 되기도 하는 것은 경계를 규정하고 관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생각들 때문이다.

경계는 정치 영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

난다.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경계를 가르고 그 경계를 적대적으로 해석한다. 뿌리 깊은 불신이 문화의 한 본질이 된 것 같다는 로베르트 무질의 걱정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다. 케인즈와 무질의 우려 끝에 히틀러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해야 할까?

한국은 ‘경계’ 때문에 20세기에 이어 21세기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운명을 독하게 옥죄고 있는 ‘경계’를 정치적으로, 물리적(지리적)으로 먼저 만들었다. 그런 경계의 한쪽에 살면서 함께 사는 구성원들까지 둘로 나누고 상대를 제거해야 할 작으로 간주하고 사는 일을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온 나라다. 그런 어떻게 이해해도 기형이다.

경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정치적 패거리들 나누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과 문화에도 심각한 중상을 심는다. 불행히도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 작은 영역, 큰 영역 가릴 것 없이 적대와 중오의 언어가 넘치는 나라가 됐다. 경계 밖을 적으로만 이해하면 문화도 예술도 협소한 구덩이로 빠진다. 경계 밖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고 어두운 구멍이 적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말은 전쟁 밖에 없다.

말 좀 할 줄 안다는 반지성적 선동가들이 앞세우는 적대적 언어에 부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말 좀 할 줄 안다는 것이 ‘지성’의 징표는 아니다. 지성은 경계 안과 밖의 존재들을 더욱 오롯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돕지만, 적대적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다.

社說

새 정부 국정과제 대거 포함 광주·전남 도약의 기회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 구체화된 것으로 국가과제로 추진 동력을 얻었다.

가장 먼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이 명시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도 이뤄지도록 힘쓰기로 했다. 광주의 신성장인 인공지능(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전남의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과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역시 반영됐다. 장기 표류하는 광주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한 초광역 협력사업, 행정통합도 본격화 될 수 있다.

시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제감 효과가 큰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과

정치, 전문가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책과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물론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까지 접촉 면을 더 확대해야 한다.

새 정부 5년의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제1호 과제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한 개헌 추진으로 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또한 주시하는 경제발전 전략에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밖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제·지방세 비율 7대3 조정 등도 주목되고 있다. 핵심 공약과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2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광주·전남이 국가 미래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전남 AI 슈퍼클러스터 투자 지원에 대한 아쉬움

전남도 역점 사업으로 해남군 솔라시도에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사업의 본격이 연기됐다. 우선협상권자인 투자그룹 스톱 팜 로드의 자회사인 퍼힐스가 이달 말 예정된 시한을 앞두고 자력 연장을 요청한 때문으로, 전남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6개월 뒤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첫 단추 격인 부지 공급 계약이 불발돼 아쉬움이 크다.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퍼힐스는 세계 최대 3GW 규모의 데이터센터·ESS 구축과 관련, 선도 사업으로 100MW급 투자를 제안했지만 현재 10억달러(1조4천억원) 정도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힐스는 당초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일원 120만평에 2028년까지 7조원, 2030년까지 8조원 등 총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을 비롯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검토하다 솔라시도를 낙점했다.

퍼힐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등의 빅테크와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전남의 넓은 부지, 풍부한 전력과 용수, 우수한 인력, 지진 안정성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실현 등 최적 조건과

연결시켜 펀드레이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AI 슈퍼클러스터의 중추 시설인 데이터센터에 이용할 엔드 유저(End-user·최종 사용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일단 퍼힐스 측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 점에선 고무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전기료 할인, 규제 제로 등을 골자로 한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기업 친화적 재생에너지 정책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구성지구에는 미국 북버지니아의 25GW나 중국 베이징의 1.8GW를 능가하는 슈퍼데이터 클러스터 허브를 중심으로 AI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교육, 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AI 에너지 신도시’가 조성된다. 미래 첨단기업의 요람을 지향하는 솔라시도의 성과가 달랐다.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제도약과 글로벌 AI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자치칼럼



김 병 도
전남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선은 지역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제로서,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의 실천 공간으로 기능한다. 기초의회는 지역주민의 생활 현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율하고 감시하는 핵심 기구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민주적 대표성과 정책 역량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는 기초의회 선거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지역 정치의 실효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중대선거구제에 따른 대표성 결여가 심각하다. 현행 중대선거구제도는 인구가 많은 읍면동을 대표하기 쉽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행정 읍면동은 소외되고 있다. 지역의 의제를 대표할 임원이 부재한 상황이다. 최소한 동능을 구분하고, 읍면동 단위 대표성을 복원하는 선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정당공천의 폐해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종속이 심각하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적용되면서,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역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원 기반이 취약한 기초단위에서는 실질적인 주민 심의보다 정당 간 물밑 거래, 전략 공천, 친소 관계에 따른 공천

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이는 후보자 자질과 지역 연계성보다는 소속 정당과의 관계가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셋째, 정책 기반 약화와 낮은 경쟁력을 들 수 있겠다. 기초의회 선거는 정책 중심 경쟁보다 정당의 브랜드 경쟁, 조직 동원력, 지역 유지 중심의 선거로 흐르기 쉽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의 정책 토론이나 의정 계획보다는 정당 간 대결 구도, 중앙 정치 이슈의 반복 재현이 많아 유권자가 지역의 제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는 기초의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저하시켜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넷째, 지역정치 신인·청년·여성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는 기초의원 선거에 도전하려는 무소속, 청년, 여성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당공천 없이 후보로 나설 경우 선거운동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고, 인지도가 낮은 신인의 당선은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기초의회는 고령화되고 폐쇄적인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대교체와 다양성 확대에 실패하고 있다.

문제점을 토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도시형과 농촌형 선거구제를 다양화해야 한다. 다양한 선거구제를 지역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화해 다양한 정당과 후보자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 의회의 구성 다양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또는 시민추천제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시민추천제, 지역주민 경선제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은 기초단위 정당공천이 오히려 정치불신과 지방정치에 대한 회피를 유도한다고 인식한다. 무

소속 후보가 중심이 되면 정당의 보호 없이도 지역 기반을 갖춘 인물들이 정책 중심 경쟁을 할 수 있다. 셋째, 정책경쟁 유도 및 자격 검증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토론회 의무화, 후보자의 의정활동 계획서 제출,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정책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청년·여성 후보 지원과 정당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청년, 여성 등 소외집단에 대한 가산점, 성 균형, 전략공천 의무화, 후보자 다양성 지표의 공개 등 정당의 책무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의회 출마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2주 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당에서 추진하는 교육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역량을 키우기에는 부족하다.

지역 민주주의의 회복은 기초의회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대안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 시작점에 있는 기초의회가 현재와 같이 ‘무관심의 정치’로 방치된다면, 지방자치의 미래 역시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지방정치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는 다시 정치 무관심과 선거의 저조한 경쟁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기초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은 단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비를 넘어, 정치의 생활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의회가 주민과 가장 멀어져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기초의회가 다시 살아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가능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초고령 사회 교통약자에 속하는 노인의 보행권 인지에 안전대를 잡는 안전운행이 최근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보폭은 약 0.7m로 분당 100회 이상 걸지만 노인들은 평균 보행속도가 초당 0.8m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의 활동 영역 비중이 높은 새벽 시간대 차량 운행 중 노인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지역별, 시간대

교통약자 노인 보행속도 이해하면 사고 줄어든다

별 실정에 맞는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경찰에서도 도농 지역별 실정에 맞는 노인 교통안전책을 마련해 실시하고는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점점 등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의 행동특성을 잘 헤아려 운전자는 보행중인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공경과 보호의 운전습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쑥

강성남



참 쑥스럽게 오고 있다
당신은 맨발로 달려오고 나는 이를 막지 못한다
밀폐된 겨울 다 쏟아버리고 피멍 든 제 속을 들여다본다
우주의 문이 열리고 얼떨결에 꿈틀거리는 정지하면
칙칙했던 촉백나무에도 색이 들어

깊은 바닥을 일으키는 눈빛처럼 해돋이 땅에 솟는 쑥
비밀처럼 묻혀있던 시간이 풀고 나오듯 쑥쑥 자라는 쑥을 바라보며
욕됨을 무릅쓰는 나는 아직 말 못할 반성이 있는지 살핀다.
(시집 ‘담양 가세 담양 사세’, 시와 사람, 2025)

[시의논]

벌레에 채는 쑥을 보며 가추성된 동행이와 다름없는 자연물이라기보다는 애는 없었는가. 쑥과의 약연에서 일어난 경험이다. 피멍겨울의 한기이기고 다시 들끓을 파랑개 채우기는 쑥의 행진을 보면서 그의 질긴 생명력에 감탄해본 적은 없었지만, 쑥과의 좋은 인연이라 할 것이다. 봄날 어린 쑥은 풀나물, 봄쑥국으로 그리고 전으로 떡으로 변주를 일으키며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결코 그 흔해빠진 잉어대생식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것을 깨닫게 된다. 뽕밭만맛과 은은한 향이 녹색의 숲에서 배어 나오는 것은 투박하고 소박한 풀이 가슴에 고이는 정을 두루 지니는 사람을 향해 온기를 묻혀 풀어준다는 의미다. 쑥은 늘 자신의 잣대를 고수한다. 그의 권위는 나물, 국물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섭생의 쓰임새로 확대 재생산된다. 해열, 지열, 면역력 강화, 노화방지 등 처방 기능은 끝물할 만하다. 소화 촉진, 혈관 기능, 뇌 기능 개선까지 쑥의 행진을 즐기는 이유일 것이다. 쑥이 성장해 활성화되면 우주의 문이 열린다. 비밀처럼 묻혀있던 시간이 풀고 나오는 쑥의 시간이다. 속도를 어찌 맞추고 싶다. 실존적 자아의 쑥은 침화와 반성의 기제를 부여한다. 쑥에게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 말 못할 반성이 남아 있는지. (윤심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101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